

28일 본격 시행 김영란법 4만919개 기관 적용

학교·언론사 등 3만9622개 96.8% 차지

오늘 국무회의 의결 ... ‘3·5·10’ 기준 유지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사실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6개월만에 시행령도 모두 완비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김영란법 시행령이 상정된다”고 5일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이미 관계부처와의 조율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이 월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했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상한액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받으면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알 날부터 이를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무공통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사무분장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사실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6개월만에 시행령도 모두 완비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김영란법 시행령을 발표했고, 8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

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다. 이 가운데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각급 학교 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인 1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상과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다. 또 신문사업자가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7320개, 뉴스통신사업자가 21개,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6149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시의회, CCTV통합관제센터 방문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보현)는 5일 오전 서구 화정동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듣고 운영 현황과 시설들을 확인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김대중센터서 열린다

내일부터 사흘간

제8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7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기후환경분야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환경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제전시회다.

광주시에 따르면 7개국 140여개 업체가 참가하며 대기오염방지, 수(水)처리관, 폐기물관, 기후변화대응관, 중국 특별관 등 5개 전시관이 운영된다.

특히 광주-광저우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중국 특별관은 지난 3월 광주시와 광주환경산업협회, 광저우, 광둥성 환경보호산업협회 간 환경산업 교류협력을 따른 후속조치다.

전시회와 함께 구인·구직을 위한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도 열린다.

취업 컨설팅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다.

박람회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에게는 온라인을 통해 지속해서 일자리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물순환도시 대응전략, 기후변화대응 융합워크숍 등 다양한 기후·환경 관련 포럼과 학술행사가 열린다.

이효상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5일 “이번 환경산업전을 통해 환경산업 수요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등 지역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지역 특산자원 활용 화장품 개발 추진

갈대·오디·대나무·편백 등 이용 中 소비자 공략

전남도가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해 유기농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추진한다.

신물질은 연구·개발, 대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중국 소비자들까지 공략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특산자원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유기농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산업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전남 천연자원을 조사한 뒤 성분 연구, 피부 저자극테스트, 화장품으로 활용 가능한 물질 개발, 대기업 기술 이전 등을 한다.

신물질 추출이 가능한 특산자원으로 갈대·오디(마스코백), 대나무(미백), 편백(아토피), 황칠(탈모예방), 햇개뽕(미백), 미역귀(주름 개선) 등이 거론되

고 있다.

전문가 14명이 참여한 기획자문단을 최근 구성했고, 화장품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남도는 오는 2021년까지 대기업 기술이전 등을 마치고로 했다.

전남의 특산자원이 우울증 개선, 기미 제거, 숙면 유도 등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면 기존 화장품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틈새시장 공략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이 지역에 생산 공장을 설립·운영하면 천연 생물 의학 산업 기반이 확 대된다”며 “국내 화장품에 관심이 큰 중국 젊은 여성들이 유기농 기능성 화장품을 선호해 중국 소비자 공략 품목으로도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 한·중 정상회담 직후 탄도미사일 3발 발사

북한이 5일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면서 “미사일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으로 사전 항행정보 발령없이 발사됐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날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

BM)을 발사한 지 12일만으로, 노동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이뤄졌다. 또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G20 정상회의와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광주시금고, 영업점 분포도 전국 확대 유지하되 배점 낮춰

광주시의회 ‘시금고 조례 개정안’ 수정 통과

올해 연말 새롭게 선정될 4조원대 광주 시 시금고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두 차례 보류됐던 ‘시금고 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일부 내용이 수정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원들은 ▲대손충당금 적립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관내 지점 수와 지

역 주민 이용 편리성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계획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OCR 센터 운영능력과 계획 등 배점과 평가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행차위는 개정안이 담은 평가방식과 현행 방식을 절충해 시가 내놓은 수정안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을 위한 영업점 분포도를 관내에서 전국 영업점까지로 확대한 개정

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낮췄다.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배점은 3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4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도 개정안은 3점이었지만, 2점으로 하향 수정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배점을 2점으로 하는 개정안을 3점으로 상향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개정안 대로 평가항목에서 삭제기로 했다.

의결안은 대부분 시의 수정안과 같지만,

영업점 분포도와 관련해서만 관내 영업점 평가를 제안한 시의 의견과 달랐다.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중앙 또는 지방은행의 우불리 섹션 계산이 이어진 가운데 시의회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한편, 광주시 1급고 운영 기관인 광주는 행은 2012년 기준 전체 예산 3조5629억원 중 3조4776억원을, 2급고는 국민은행이 853억원을 맡았다.

조례안은 오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행자위 의결에 앞서 조례를 발의한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은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종-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CHANGHAN WEARING AIR COOPERATIVE